

1) 기본이념

- (1)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5)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 등)가 권장되어야 한다.
- (6)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7)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 (8)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용어의 정의

(1)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구.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3) 정신건강의 날

- (1)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 (2)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 및 2급 자격)로 구분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

종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①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③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상담 및 권익옹호지원 ④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법 제48조에 의한 입원적합성조사 및 법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부사건의 조사 ⑥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⑦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⑧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⑨ 정신건강복지 지원사업 수행 및 교육 ⑩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 수립 ⑪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지원 활동
정신건강임상심리사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학적 개입
정신건강간호사	① 정신질환자등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방문지도 및 사회사업적 개입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한기법 품종/생성/재증)

- ①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② 재활훈련시설 :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시행령 제16조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중독자 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2)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3) 종합시설
정신재활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자조활동, 지역사회 자립, 위기지원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4) 그 밖에 정신질환자들의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종류	사업
생활시설 (임소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재활훈련시설	(1)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공동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p>제공하는 시설</p> <p>(4) 직업재활시설</p> <p>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p>
중독자 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성별·생애 유형별시설	<p>(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p> <p>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p>
종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7) 입원 등

(1) 자의입원 등

-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자의입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 ③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동의입원 등

-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까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 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5) 응급입원

-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